

2012년 기후변화총회 유치,

UN
Climate Change
Conference

2012년 제 1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대한민국이 띄고 있습니다!

“미래의 눈물을 멎게 하기 위한 국제사회 노력의 출발”

우리가 사는 지구의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화하기 위하여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 자네이루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되었습니다.

2012년 제 1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기후변화협약을 구체화시키는 걸음걸음”

당사국총회(COP, Conference of the Parties)는 매년 하반기 전 세계 194개국 3만명 내외가 모이는 기후변화 관련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입니다. 교토의정서가 바로 이 회의에서 합의된 국제 사회의 약속 중 하나였습니다.

기후 변화는 위기이자 새로운 기회

– 2012년 기후변화총회 유치, 새로운 국제질서 수립 선도



기후변화는 현 세대가 직면한 새로운 도전입니다. 금년 1월 우리나라는 계속되는 한파, 영동지방의 폭설을 겪었습니다. 한편 지구 반대편인 남반구 호주에서는 폭우로 한 도시의 대부분이 물에 잠기고 내륙 쓰나미 현상까지 보였다고 합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적 전문가그룹인 IPCC는 인간 활동에 의해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기후변화는 먼 미래가 아니라 현실로 닥친 문제입니다.

그 동안 국제사회는 유엔을 중심으로 1992년 6월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 안정화를 목적으로 한 협약을 채택하면서 본격적으로 기후변화 대응방안을 강구하여 왔으며, 1995년부터 2010년까지 총 16차례 걸쳐 기후변화 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구 온난화에 역사적 책임이 큰 선진국들에게 그 원인이 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여한 교토의정서가 바로 이 회의를 통해 마련되었습니다.

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된 지 20년이 되는 2012년 제18차 총회(COP18)는 아시아지역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현재 우리나라와 카타르가 유치의사를 표명하여 경합 중입니다. 금년 12월 남아공 더반에서 개최되는 제17차 총회에서 개최국이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는 G20 서울 정상회의 등을 통해 협상중재 역량과 리더십을 인정받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처음으로 녹색성장을 장기 국가발전전략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제 선진국의 길을 뒤따라가는 대신 우리가 스스로 길을 내서 세계가 뒤따라오도록 이끄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COP18 유치는 이러한 우리나라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COP18 유치에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12년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국제 질서가 마련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COP18 유치위원장 **한승수**

기후변화, 피할 수 없는 현실



- 2010년 전 세계 평균기온 14.52℃ 기록(1880년 기온측정이 시작된 이래 최고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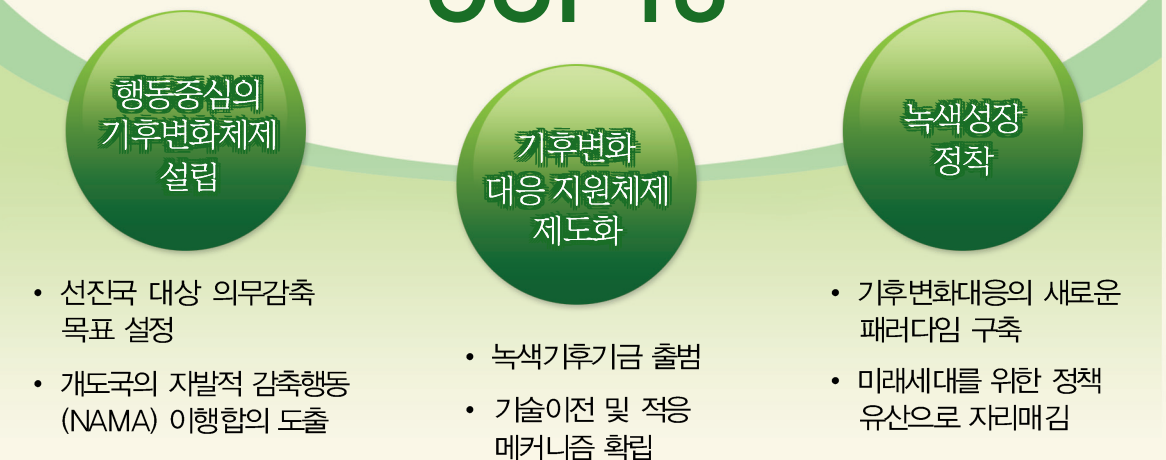
2012년 제18차 당사국총회(COP18)

- **기 간** 2012년 11월말 ~ 12월 초(2주간)
- **개 회 지** 아시아지역(매년 5개 대륙 순환원칙에 따라 개최)
- **구 성** 협약 당사국총회와 연계하여 교토의정서 당사국회의(CMP), 부속기구회의, 협상작업반회의 등 병행 개최
- **참가규모** 3만 명 내외(194개 당사국, 국제기구, NGO, 언론 등)



2012년은 기후변화협약 채택 20년이 되는 해이자, 교토의정서에 따른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1차 공약기간(2008~2012년)이 종료되는 시점
따라서 2012년 이후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Post-2012) 체제의 출범을 앞둔 전환기

COP18



협상 중재능력과 리더십을 지닌 대한민국

COP18 유치, 대한민국이 뛰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는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여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 제15차 총회에서 2020년까지 배출 전망치(BAU) 대비 30% 감축목표 발표(2009.12, 덴마크)
- 온실가스 목표관리지침 마련,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설립

Post-2012 기후변화 대응체제 수립을 위한 협상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 제16차 총회에서 온실가스 감축행동 등록부 설치, 저탄소 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 등을 제안하여 합의 도출(2010.12, 멕시코)

“G20 서울정상회의 합의문”을 통해 기후변화협상 타결 지원
Post-2012 체제에 대한 협상 타결을 촉구하고 코펜하겐합의문에 대한 지지와 이행을 재확인

다함께 행동을! (Act Together)

기후변화 문제의 시급성과 파괴력을 감안할 때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더 이상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해 서는 무엇보다 ‘나부터’(Me First)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너부터’(You First)라는 마음가짐으로는 위기에 빠진 지구를 구해낼 수 없습니다.

— 2009.12.17, 제15차 당사국총회(COP15), 이명박 대통령 기조연설



녹색성장의 중심 대한민국

COP18 유치, 대한민국이 뛰고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비전으로 선포한 이후 국제사회의 녹색성장 정책을 선도해오고 있습니다.

- 저탄소녹색성장 국가전략 수립(2009.7), 녹색성장기본법 시행(2010.4)
-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2010.10)

우리의 경험과 사례를 토대로 녹색성장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 동아시아 기후 파트너십(East Asia Climate Partnership)
 - 유엔, 세계은행 등과 협력하여 아시아지역 국가들의 기후변화 대응(물 랜드마크 사업, 폐지원 관리사업)에 5년간(2008~2012년) 2억 달러 지원
-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 2010년 6월 설립 이후 브라질, 이디오피아, 인도네시아 등 국가별 녹색성장전략 수립 지원, 우수 사례 발굴 · 전파 및 관련 국제연구기관과 교류 · 협력 본격화



2012년 COP18, 대한민국에서 개최된다면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국제적 리더십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없는 협약 당사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자발적인 감축목표를 수립·이행 중에 있습니다.
※ 2005년 대비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AU) 대비 30% 감축 선언(2009.12, COP15)
- 선진국의 역사적 온실가스 배출 책임, 주요 개도국의 감축의무 동참 등 기후변화 협상에서 참여한 입장대립을 보인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가교역할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 COP16(2010.12)에서 채택된 ‘칸쿰 합의’에 저탄소 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 선진국과 개도국을 구분한 감축행동 등록부(NAMA Registry) 설치 등을 제안하여 반영함
- ‘2010 G20 서울 정상회의’에 이어 2012년 당사국총회 의장국으로서 협상 중재능력을 발휘하여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 국제질서 수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국가 이미지 향상으로 국격 제고와 경쟁력 강화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 대규모 국제회의 개최에 따른 세계 언론의 보도로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주요 합의문이 채택될 경우 개최지 명칭이 포함됨에 따라 지속적 홍보효과가 있을것입니다.
※ 교토의정서, 발리행동계획의 경우 개최지 명칭이 언론에 빈번하게 노출됨
- 지구환경 문제에 대한 리더십을 보여줌으로써, 글로벌 리더로서 국가이미지 제고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국가브랜드가치 향상은 우리나라 제품의 인지도 상승과 세계시장 진출기회 증대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2012년 COP18, 대한민국에서 개최된다면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능력에 걸맞는 합의도출이 가능합니다”

- 우리나라 역량에 맞는 감축의무수준이 결정되도록 의장국으로서 유연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에 기여할 것입니다”

- 당사국총회 개최국으로서 국민적 자긍심을 고취하고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공감대 확산은 고유가 시대에 녹색생활과 에너지안보 달성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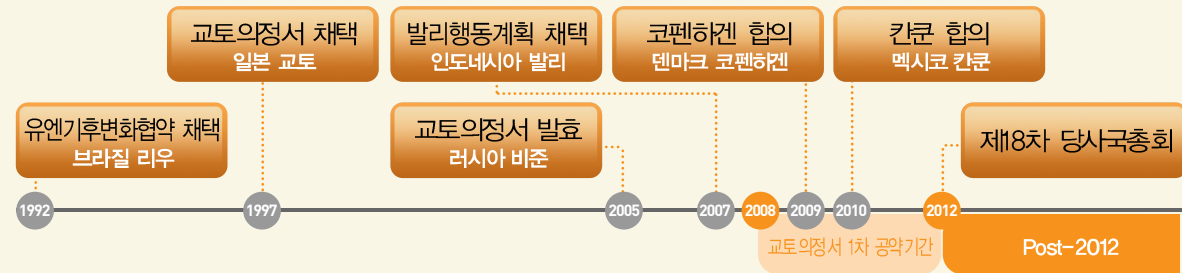
“경제적 파급효과와 함께 신성장동력 육성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 수만명에 달하는 회의 참가자들의 지출로 상당한 규모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됩니다.
※ 타당성조사 결과, 외국인 2만5천명 참가시 약 3,5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
- 신·재생에너지, 컨벤션, 문화·관광서비스 등 새로운 산업 발전의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녹색성장 선도국가로서 우리의 입지를 확고히 할 것입니다”

- 녹색성장을 기후변화 대응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 궁극적으로, 우리나라가 선도해온 ‘저탄소 녹색성장’이 지구촌 미래세대를 위한 대표적 정책유산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기후변화협약 20년의 여정



리우 정상회의

'기후변화협약'(UNFCCC)

- 선진국의 선도적인 역할수행을 강조하면서 모든 당사국이 차별화된 책임과 각자의 능력에 맞게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원칙 천명
 - 선진국(협약 부속서 I 당사국)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 규모를 1990년 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대책 수립·이행 및 개도국 지원 촉구
 - 아울러 개도국을 포함한 모든 당사국에 대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 수립·이행 및 주기적인 이행상황 보고 등 공통 의무 부여

1992.6.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COP3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 선진국 대상 제1차 공약기간(2008-2012년) 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배출량 대비 평균 5.2%를 감축토록 규정

1997.12. 일본 교토

COP13

'발리행동계획'(Bali Action Plan)

- 온실가스 감축행동 강화를 위해 모든 당사국이 측정·보고·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적정 감축행동(NAMA, Nationally Appropriate Mitigation Action) 실시 합의
- 선진국은 측정·보고·검증 가능한 국내적으로 적정 감축공약/행동 실시
- 선진국의 기술·재정 지원과 함께 개도국도 국내적으로 적절한 감축행동 실시
- 협약 부속기구로서 협상작업반을 설립하여 2012년 이후 협약이행방안 마련을 위한 정부간 협상을 진행하기로 함

2007.12. 인도네시아 발리

COP15

'코펜하겐 합의'(Copenhagen Accord)

- 당사국총회 사상 처음으로 정상회의 개최, 우리나라, 미국, EU 등 주요 20여개국 정상들이 참석한 가운데 합의문 마련
 - 비전**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C 미만으로 억제
 - 감축** 선진국은 정량화된 감축목표, 개도국은 감축행동을 각각 사무국에 제출
 - 재정** 2010-2012년간 300억불 조성, 2020년까지 연간 1천억불 목표로 조성

2009.12. 덴마크 코펜하겐

COP16

'칸쿤 합의문'(Cancun Agreement)

- 코펜하겐 합의를 구체화한 당사국총회 결정문 채택
- 저탄소 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 선진국과 개도국의 감축행동을 구분, 감축행동 등록부(Registry) 설치(우리나라 제안 반영)
- '코펜하겐 합의문'상의 장기 비전, 녹색기후기금 설립, 기술이전·적응 메카니즘 설립 등 반영·구체화

2010.12. 멕시코 칸쿤

전문가가 바라본 2050년 이후 한반도의 모습



Q&A

2012년 제18차 기후변화총회(COP18)의 개최국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2012년 COP18은 5개 대륙 순환개최 원칙에 따라 아시아지역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2009년 12월 제15차 총회에서 우리나라와 카타르가 COP18 유치를 신청하였으며, COP18과 같이 한 지역에서 2개국 이상이 유치를 원할 경우 해당 지역그룹에서 우선 조정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지역그룹 논의결과를 토대로, 2011년 12월 제17차 총회(남아공 더반)에서 COP18 개최국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기후변화협상에서 선진국과 개도국간 입장 차이가 크다고 들었는데요?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진 선진국들은 전 세계 배출량의 30% 미만을 차지하는 현실임을 강조하면서 현재의 교토의정서를 폐기하고, 중국·인도 등과 같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주요 개도국들도 함께 감축의무를 지는 새로운 단일체제를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에, 개도국들은 온실가스 배출에 역사적 책임이 있는 선진국들이 개도국과는 차별화된 감축노력을 선도하여야 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교토의정서는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COP18을 유치할 경우 과도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게 되진 않을까요?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여부는 개별 당사국의 의지에 따른 주권적 사항입니다. 기후변화협약 제4조에서는 감축의무 부담국(협약 부속서1 당사국)으로 편입을 원할 경우 그러한 의사를 협약 비준서 수탁기관(유엔사무총장)에게 통보하는 등 자발적 진입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국 총회 개최국은 관례상 의장국의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으며, 2010년 COP16 의장국이었던 멕시코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오히려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됩니다.